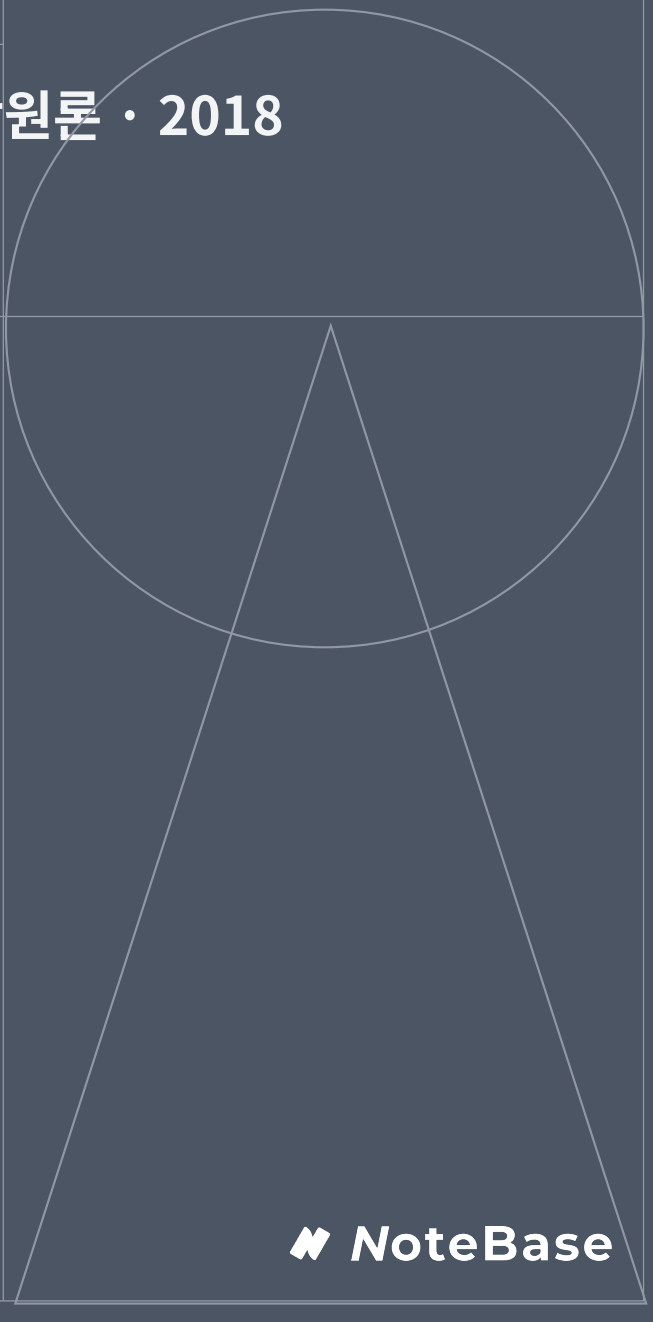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경제학원론 · 2018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경제학원론 · 2018

공무원/지방직/7급 · 경제학원론 · 2018

문 1. 본원통화량이 불변인 경우,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요인만을 모두 고르면? (단,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은 요구불예금보다 적다)

ㄱ.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대비 초과지급준비금이 낮아졌다.
ㄴ. 사람들이 지불수단으로 요구불예금보다 현금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ㄷ. 시중은행이 준수해야 할 요구불예금 대비 법정지급준비금이 낮아졌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본원통화가 일정할 때 통화승수와 통화량을 늘리는 지급준비율·현금예금비율의 변화를 묻는다.

핵심 개념

통화승수는 본원통화가 통화량으로 몇 배 확대되는지를 나타내며, 요구불예금 대비 법정지급준비율과 초과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커진다. 현금예금비율은 현금/요구불예금의 비율인데,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요구불예금보다 적다는 조건에서는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예금창조가 줄어 통화승수가 작아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맞지만 ㄴ이 틀리므로 조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ㄴ의 '현금을 더 선호'는 현금예금비율을 높여 통화승수를 낮춘다. 통화량을 늘리는 방향은 현금보다 요구불예금을 더 선호하는 경우이다.
② O: ㄱ의 초과지급준비금/요구불예금 비율 하락은 은행의 대출·예금창조 여력을 늘리고, ㄷ의 법정지급준비율 하락도 예금 중 의무적으로 묶어 둘 비율을 낮춘다. 둘 다 통화승수를 높인다.
③ X: ㄷ은 맞지만 ㄴ이 틀리므로 조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ㄴ의 '현금을 더 선호'가 아니라 '요구불예금을 더 선호'해야 통화승수가 커진다.
④ X: ㄱ과 ㄷ은 맞지만 ㄴ이 틀리므로 세 문항 모두를 고른 조합은 아니다. ㄴ의 '현금을 더 선호'는 통화량 증가 요인이 아니라 통화승수 하락 요인이다.

오답 포인트

지급준비율 하락과 현금 선호 증가는 모두 통화량을 늘릴 것처럼 보이지만 방향이 다르다. 은행이 보유할 준비금 비율이 낮아지면 예금창조가 확대되지만, 예금자가 현금을 더 들고 있으면 은행체계로 들어가는 예금이 줄어 예금창조가 축소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본원통화가 불변이면 은행의 준비금 부담을 낮추는 변화는 통화승수 상승으로, 현금예금비율을 높이는 변화는 통화승수 하락으로 판단한다. 각 문장을 먼저 O/X로 판정한 뒤 그 조합을 고른다.

암기 포인트

준비금비율 하락 → 예금창조 확대, 현금 선호 상승 → 예금창조 축소이다.

NoteBase

문 2. 직장인 K는 거주할 아파트를 결정할 때 직장까지 월별 통근시간의 기회비용과 아파트 월별 임대료만을 고려한다. 통근시간과 임대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K의 최적 선택은? (단, K의 통근 1시간당 기회비용은 1만 원이다)

거주 아파트	월별 통근시간 (단위: 시간)	월별 임대료 (단위: 만 원)
A	10	150
B	15	135
C	20	125
D	30	120

① A 아파트

② B 아파트

③ C 아파트

④ D 아파트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월별 임대료에 통근시간의 기회비용을 더한 총비용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통근 1시간의 기회비용은 1만 원이다. 표의 통근시간과 임대료는 모두 월별 수치이며, 임대료 단위도 만 원이다.

사용할 공식

총비용 = 월별 통근시간 × 1만 원 + 월별 임대료이다.
통근시간은 일을 하거나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게 하므로, 임대료뿐 아니라 시간의 기회비용도 비용에 포함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A: 10시간 × 1만 원 + 150만 원 = 160만 원이다.
B: 15시간 × 1만 원 + 135만 원 = 150만 원이다.
C: 20시간 × 1만 원 + 125만 원 = 145만 원이다.
D: 30시간 × 1만 원 + 120만 원 = 150만 원이다.
따라서 총비용이 가장 작은 곳은 C 아파트이다.

선지 판단

① X: A 아파트의 총비용은 160만 원으로 C의 145만 원보다 크다. 틀린 표현은 ‘A 아파트’이며, 올바르게는 ‘C 아파트’이다.
② X: B 아파트의 총비용은 150만 원이다. C보다 5만 원 크다. 틀린 표현은 ‘B 아파트’이며, 올바르게는 ‘C 아파트’이다.
③ O: C 아파트의 총비용은 145만 원으로 네 아파트 중 가장 작다.
④ X: D 아파트는 임대료만 보면 가장 낮지만, 통근시간 30시간의 기회비용 30만 원을 더하면 총비용은 150만 원이다. 틀린 표현은 ‘D 아파트’이며, 올바르게는 ‘C 아파트’이다.

오답 포인트

D는 월별 임대료가 120만 원으로 가장 낮아 보이지만, 긴 통근시간의 기회비용을 빼먹으면 오답이 된다. B와 D는 모두 150만 원이므로 임대료만으로 순위를 정할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대안에 대해 통근시간 × 시간당 기회비용을 먼저 구한 뒤 임대료에 더하고, 그 총비용이 가장 작은 대안을 고른다.

암기 포인트

가격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포기한 시간의 가치는 기회비용으로 계산한다.

NoteBase

문 3.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자국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들여온 재화의 양

② 자국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여 외국 지사에 중간재로 보낸 재화의 양

③ 외국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여 제3국에 수출한 재화의 양

④ 외국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의 양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생산 주체의 국적이 아니라 생산이 이루어진 장소를 기준으로 포함 범위를 정하는 개념이다.

핵심 개념

GDP는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일정 기간 새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이다. 국내기업이 생산했더라도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면 GDP에 포함되지 않으며, 외국기업이 생산했더라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면 GDP에 포함된다. 수출 여부나 국내 판매 여부는 생산 장소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자국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재화는 생산지가 해외이므로 국내로 들여와도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X: 자국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재화는 외국 지사에 중간재로 보내더라도 국내 생산이므로 GDP에 포함된다. 틀린 표현은 '포함되지 않는'이라는 취지이며, 올바르게는 'GDP에 포함되는 재화의 양'이다.
③ X: 외국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재화는 제3국으로 수출하더라도 국내 생산이므로 GDP에 포함된다. 틀린 표현은 '포함되지 않는'이라는 취지이며, 올바르게는 'GDP에 포함되는 재화의 양'이다.
④ X: 외국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는 국내 생산이므로 GDP에 포함된다. 틀린 표현은 '포함되지 않는'이라는 취지이며, 올바르게는 'GDP에 포함되는 재화의 양'이다.

오답 포인트

자국기업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①을 GDP에 넣기 쉽다. GDP는 기업의 국적이 아니라 공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해외 공장 생산은 수입되어도 GDP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재화를 생산한 공장이 국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국내 생산이면 기업 국적, 수출, 국내 판매와 관계없이 GDP에 포함되고, 해외 생산이면 국내기업의 생산물이어도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GDP는 국적이 아니라 국내 영토 기준이다: 국내 생산은 포함, 해외 생산은 제외이다.

NoteBase

문 4. 완전경쟁시장에서 활동하는 A기업의 고정비용인 사무실 임대료가 작년보다 30% 상승했다. 단기균형에서 A기업이 제품을 계속 생산하기로 했다면 전년대비 올해의 생산량은? (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다)

① 30% 감축

② 30% 보다 적게 감축

③ 30% 보다 많이 감축

④ 전년과 동일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경쟁기업의 단기 생산량이 고정비용 변화가 아니라 한계비용과 시장가격의 관계로 결정된다는 점을 묻는다.

핵심 개념

고정비용은 생산량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비용으로, 사무실 임대료가 이에 해당한다. 변동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이며, 단기 완전경쟁기업은 시장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은 생산량에서 이윤을 극대화한다. 고정비용이 상승해도 한계비용은 변하지 않으므로 단기 생산량은 변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30% 감축'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사무실 임대료는 고정비용이므로 30% 상승해도 한계비용과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변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생산량이 전년과 동일하다.
② X: '30%보다 적게 감축'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고정비용 증가는 생산량을 조금 줄이는 요인도 아니다. 올바르게는 생산량이 전년과 동일하다.
③ X: '30%보다 많이 감축'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고정비용 상승률과 생산량 감축률을 비교할 근거가 없다. 올바르게는 생산량이 전년과 동일하다.
④ O: 다른 조건이 불변이면 임대료 상승은 고정비용만 증가시킨다. 완전경쟁기업의 단기 생산량을 정하는 한계비용이 변하지 않으므로 생산량은 전년과 동일하다.

오답 포인트

총비용이 증가하면 생산량도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총비용의 증가가 고정비용 때문이라면 한계비용은 변하지 않으므로 단기 생산량은 그대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용 변화를 보면 먼저 고정비용인지 변동비용인지 구분한다. 고정비용만 변하면 완전경쟁기업의 단기 공급곡선과 생산량은 변하지 않고, 한계비용을 바꾸는 변동비용이 변하면 생산량이 달라진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고정비용은 이윤은 바꾸지만 단기 생산량은 바꾸지 않는다.

NoteBase

문 5. 다음은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된 케인즈 모형이다. 이때 투자지출은 120으로, 정부지출은 220으로, 조세수입은 250으로 각각 증가할 경우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는?

소비함수: $C = 0.75(Y - T) + 200$
투자지출: $I = 100$
정부지출: $G = 200$
조세수입: $T = 200$

① 10 감소
② 10 증가
③ 20 감소
④ 20 증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세가 있는 케인즈 모형에서 투자·정부지출·조세의 변화가 균형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한계소비성향은 $c = 0.75$이다.
투자지출은 100에서 120으로, 정부지출은 200에서 220으로, 조세수입은 200에서 250으로 변한다.
따라서 $\Delta I = 20$, $\Delta G = 20$, $\Delta T = 50$이다.

사용할 공식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는 $\Delta Y = \frac{1}{1-c}(\Delta I + \Delta G - c\Delta T)$이다.
투자와 정부지출은 총수요를 직접 늘리고, 조세 증가는 가처분소득과 소비를 줄이므로 $c\Delta T$만큼 빼 준다.

계산 과정

1. 지출승수는 $\frac{1}{1-0.75} = 4$이다.
2. 자율지출의 순변화는 $20 + 20 - 0.75 \times 50 = 2.5$이다.
3. 따라서 $\Delta Y = 4 \times 2.5 = 10$이므로 균형국민소득은 10 증가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계산 결과는 10 감소가 아니다. 틀린 표현 '10 감소' → 올바르게는 '10 증가'이다.
② O: 투자와 정부지출의 증가 효과에서 조세 증가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를 반영하면 균형국민소득은 10 증가한다.
③ X: 계산 결과는 20 감소가 아니다. 틀린 표현 '20 감소' → 올바르게는 '10 증가'이다.
④ X: 계산 결과는 20 증가가 아니다. 틀린 표현 '20 증가' → 올바르게는 '10 증가'이다. 조세 증가 효과 0.75×50을 빼지 않으면 증가폭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오답 포인트

'120으로, 220으로, 250으로 증가'는 각각의 변화량이 아니라 각 변수의 변화 후 수준을 뜻한다. 따라서 변화량은 120, 220, 250이 아니라 각각 20, 20, 50이다. 또한 조세승수는 $-\frac{c}{1-c}$이므로 조세 증가는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변수의 처음 값과 나중 값을 비교해 먼저 변화량을 구한다. 그다음 $\Delta Y = \frac{1}{1-c}(\Delta I + \Delta G - c\Delta T)$에 대입해 투자·정부지출 효과와 조세 효과의 부호를 함께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정부지출승수는 $\frac{1}{1-c}$, 조세승수는 $-\frac{c}{1-c}$이다. 조세는 소비를 거쳐 영향을 주므로 정부지출보다 승수의 절댓값이 작다.

NoteBase

문 6. 갑과 을이 150만 원을 각각 x와 y로 나누어 가질 때, 갑의 효용함수는 $u(x)=\sqrt{x}$, 을의 효용함수는 $u(y)=2\sqrt{y}$이다. 이때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과 공리주의적 배분은? (단, 공리주의적 배분은 갑과 을의 효용의 단순 합을 극대화하는 배분이며 단위는 만 원이다)

①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 $x+y=150$을 만족하는 모든 배분이다. 공리주의적 배분: $x=75,\ y=75$

②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 $x=30,\ y=120$의 배분이 유일하다. 공리주의적 배분: $x=75,\ y=75$

③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 $x=75,\ y=75$의 배분이 유일하다. 공리주의적 배분: $x=30,\ y=120$

④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 $x+y=150$을 만족하는 모든 배분이다. 공리주의적 배분: $x=30,\ y=12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원을 모두 배분한 경우의 파레토 효율성과 효용의 단순 합을 극대화하는 공리주의적 배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갑과 을에게 배분할 총액은 150만 원이므로 $x+y=150$이다. 두 사람의 효용은 각각 $u_A(x)=\sqrt{x}$, $u_B(y)=2\sqrt{y}$이다. 두 효용함수는 모두 배분액이 늘수록 증가한다.

사용할 공식

공리주의적 배분에서는 효용의 합 $W=\sqrt{x}+2\sqrt{y}$를 $x+y=150$ 아래에서 극대화한다. 한계효용이 같아지는 조건은 $MU_A=MU_B$, 즉 $\frac{1}{2\sqrt{x}}=\frac{1}{\sqrt{y}}$이다. 효용의 합을 최대로 하려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1단위를 옮길 때의 한계효용이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frac{1}{2\sqrt{x}}=\frac{1}{\sqrt{y}}$에서 $\sqrt{y}=2\sqrt{x}$이므로 $y=4x$이다. 이를 $x+y=150$에 대입하면 $5x=150$이므로 $x=30$, $y=12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x + y = 150$을 만족하는 모든 배분이라는 부분은 맞지만, 공리주의적 배분을 (75, 75)로 제시한 부분이 틀리다. (75, 75)가 아니라 (30, 120)이다.
② X. (30, 120)은 공리주의적 배분이지 유일한 파레토 효율적 배분이 아니다. $x + y = 150$인 모든 배분은 한 사람의 배분을 늘리려면 다른 사람의 배분을 줄여야 하므로 파레토 효율적이다. 틀린 표현인 '유일하다'는 '모든 $x + y = 150$의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75, 75) 하나로 유일하지 않으며, 공리주의적 배분도 (30, 120)이다. 틀린 표현인 '(75, 75)의 배분이 유일하다'는 '$x + y = 150$을 만족하는 모든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자원을 전부 배분한 모든 $x + y = 150$의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고, 효용합 극대화 조건에서 구한 공리주의적 배분은 $(x, y) = (30, 120)$이다.

오답 포인트

파레토 효율성을 '가장 공평한 한 가지 배분'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 문제에서는 두 사람의 효용이 모두 배분액에 대해 증가하므로 자원이 남지 않은 모든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다. 반면 공리주의는 효용의 합을 비교하므로 을의 효용계수가 더 큰 점을 반영해 을에게 더 많이 배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효용이 모두 증가하는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총자원을 모두 배분한 상태가 파레토 효율적인지 판단한다. 그다음 공리주의 문제는 효용합을 세우고 한계효용을 같게 하거나 제약식에 대입해 극대화점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파레토 효율성은 남는 자원이 없는 배분의 범위이고, 공리주의는 효용합이 가장 큰 한 점이다.

NoteBase

문 7. 리카디안 등가(Ricardian Equivalence)는 정부가 부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조세삭감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비자들은 합리적이지 못한 근시안적 단견을 갖고 있다.
ㄴ. 소비자들은 자금을 조달할 때 차용제약이 있다.
ㄷ. 소비자들은 미래에 부과되는 조세를 장래세대가 아닌 자기세대가 부담할 것으로 기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리카디안 등가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소비자의 합리성, 자금조달 제약의 부재, 세대 간 조세부담 인식 조건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리카디안 등가정리란 정부가 감세를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도, 합리적인 소비자가 미래의 증세를 예상하여 감세분을 저축하면 현재 소비가 늘지 않는다는 명제이다. 핵심은 합리적·미래지향적 소비자, 차용제약의 부재, 그리고 미래세대의 조세부담까지 고려하는 세대 간 이전 동기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ㄱ과 ㄴ만을 고른 선택지이다.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미래 조세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소득이 부족해도 차입할 수 있어 감세분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X: ㄷ을 포함한다. 틀린 표현은 '장래세대가 아닌 자기세대가 부담'이다. 올바르게는 미래 조세가 장래세대에 전가될 수 있더라도 소비자가 유산 등을 통해 그 부담을 고려하는 세대 간 이전 동기가 필요하다.
③ X: ㄷ을 포함하고 ㄱ을 빠뜨렸다. 틀린 포함 표현 ㄷ은 '장래세대가 아닌 자기세대'이며, 올바르게는 장래세대의 조세부담도 현재 소비자가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성도 필요하다.
④ X: ㄱ·ㄴ·ㄷ을 모두 고른 선택지이지만 ㄷ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ㄱ·ㄴ에 더해 장래세대의 부담까지 내부화하는 세대 간 이전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오답 포인트

ㄷ의 '자기세대'라는 표현이 함정이다. 현재 소비자가 자신의 생애 안의 미래 조세만 예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세가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에도 그 부담을 고려하게 하는 유산 동기 등이 있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채에 의한 감세의 소비효과를 묻는 선지에서는 소비자가 미래 증세를 예상하는지, 차입 제약 없이 저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다음 세대 조세부담까지 내부화하는지를 차례로 판단한다. 세대 간 부담을 무시하는 선지는 리카디안 등가의 전제에 맞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리카디안 등가: 합리성 + 차용제약 없음 + 세대 간 조세부담 내부화 → 감세분 저축, 소비 불변이다.

NoteBase

문 8. 단기적으로 100개의 기업이 존재하는 완전경쟁시장이 있다. 모든 기업은 동일한 총비용함수 $TC(q) = q^2$을 가진다고 할 때, 시장 공급함수(Q)는? (단, p는 가격이고 q는 개별기업의 공급량이며, 생산요소의 가격은 불변이다)

① $Q = p/2$

② $Q = p/200$

③ $Q = 50p$

④ $Q = 100p$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의 공급조건 $p = MC$를 이용해 시장공급함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단기적으로 동일한 기업이 100개 존재한다. 개별기업의 총비용함수는 $TC(q) = q^2$이고, q는 개별기업 생산량이다. 시장공급량 Q는 100개 기업의 개별 공급량을 합한 값이다.

사용할 공식

한계비용은 $MC = \frac{dTC}{dq}$이고, 완전경쟁기업은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은 생산량을 공급한다. 따라서 $p = MC$를 사용한다. 시장공급은 동일한 기업들의 개별공급을 수평으로 합산하므로 $Q = 100q$이다.

계산 과정

1. $TC(q) = q^2$를 미분하면 $MC = 2q$이다.
2. 완전경쟁의 공급조건 $p = MC$를 적용하면 $p = 2q$, 따라서 개별기업 공급량은 $q = \frac{p}{2}$이다.
3. 기업이 100개이므로 $Q = 100 \times \frac{p}{2} = 50p$이다.

선지 판단

① X. $Q = \frac{p}{2}$는 시장공급량이 아니라 개별기업의 공급량 q이다. 틀린 표현 $Q = \frac{p}{2}$ → 올바르게는 $q = \frac{p}{2}$이다.
② X. $Q = \frac{p}{200}$은 기업 수 100개를 합산해야 할 때 오히려 나눈 결과이다. 틀린 표현 $Q = \frac{p}{200}$ → 올바르게는 $Q = 50p$이다.
③ O. 개별기업 공급 $q = \frac{p}{2}$를 100개 기업에 대해 합산하면 $Q = 100 \times \frac{p}{2} = 50p$이다.
④ X. $Q = 100p$는 개별기업 공급량을 p로 잘못 둔 결과이다. 틀린 표현 $Q = 100p$ → 올바르게는 $Q = 50p$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q와 Q를 혼동하게 하고, ②는 100개 기업의 공급을 합산할 때 나누게 하며, ④는 $MC = 2q$의 계수 2를 빠뜨리게 하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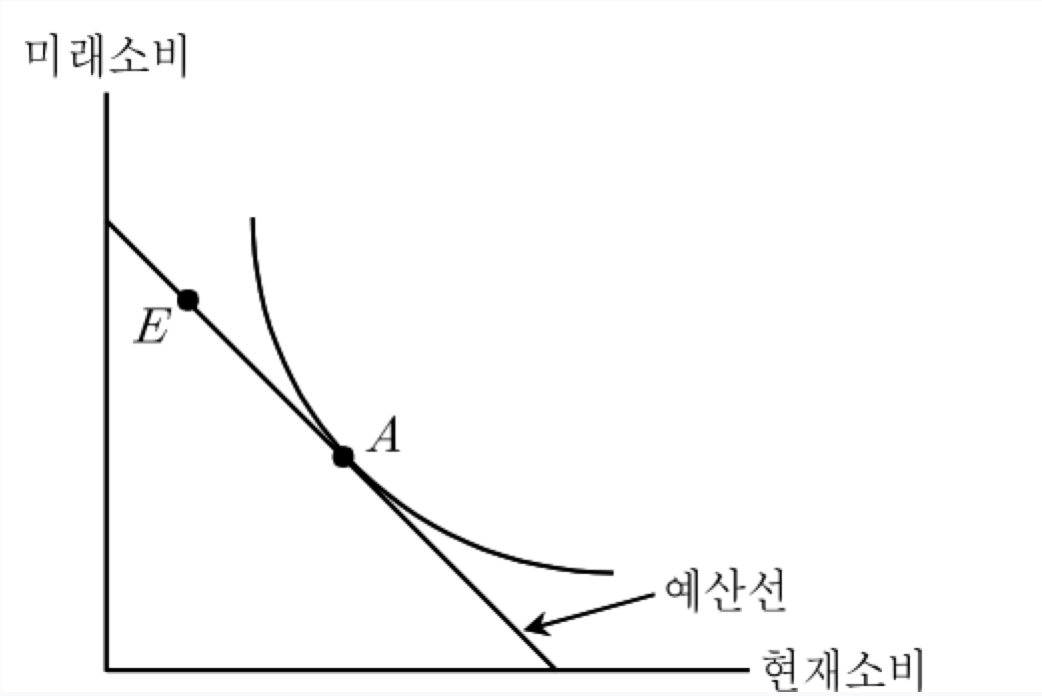
완전경쟁 공급문제는 먼저 MC를 구하고 $p = MC$에서 개별공급 $q(p)$를 구한 뒤, 동일한 기업 수를 곱해 시장공급 $Q(p)$로 바꾼다.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 $p = MC$, 시장공급: 개별공급의 수평합이다.

NoteBase

문 9. 다음은 두 기간에 걸친 어느 소비자의 균형조건을 보여준다. 이 소비자의 소득 부존점은 E이고 효용극대화 균형점은 A이며, 이 경제의 실질이자율은 r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원점에 볼록한 곡선은 무차별곡선이다)



① 실질이자율(r)이 하락하면, 이 소비자의 효용은 감소한다.

②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이 소비자는 차입자가 될 것이다.

③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정상재인 경우, 현재소득이 증가하면 소비평준화(Consumption smoothing) 현상이 나타난다.

④ 유동성 제약이 있다면, 이 소비자의 경우 한계대체율은 $1 + r$보다 클 것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두 기간 소비선택에서 소득부존점 E와 최적소비점 A의 위치로 차입·저축 여부를 판단하고, 이자율·현재소득·유동성 제약이 소비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소득부존점 E는 현재소득과 미래소득을 그대로 소비하는 점이고, 예산선 위의 A는 효용을 최대로 하는 소비조합이다.
A가 E의 오른쪽 아래에 있으므로 현재소비가 현재소득보다 크고 미래소비가 미래소득보다 작다. 이 소비자는 현재소비를 위해 차입한다.
차입자는 이자율이 하락하면 차입비용이 낮아져 예산집합이 유리하게 변한다. 유동성 제약이 결합하면 현재소비를 더 늘리고 싶어 하므로 한계대체율이 이자율 요인보다 커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A는 E보다 현재소비가 큰 차입자이다. 차입자의 경우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면 차입비용이 낮아져 달성 가능한 효용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다. 틀린 표현은 '효용은 감소한다'이며, 올바르게는 '효용은 증가한다'이다.

② O. A가 E의 오른쪽 아래에 있으므로 현재소비는 현재소득보다 많다. 부족한 현재소비를 미래소득으로 메우므로 이 소비자는 차입자이다.

③ O.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정상재이면 현재소득 증가로 평생소득이 늘어 두 시점의 소비가 모두 증가한다. 미래소비도 늘리기 위해 현재소득 증가분의 일부를 저축하므로 소비평준화가 나타난다.

④ O. 이 소비자는 본래 차입을 원하는 사람이다. 유동성 제약으로 차입이 막히면 현재소비가 원하는 수준보다 적어 현재소비의 한계효용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따라서 한계대체율은 1+r보다 크다.

오답 포인트

①은 이자율 하락이 저축자에게는 이자소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차입자에게 그대로 적용한 함정이다. 먼저 A가 E의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보아 차입자와 저축자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최적점이 E의 오른쪽 아래이면 현재소비가 현재소득보다 커 차입자이고, 왼쪽 위이면 저축자이다. 차입자는 이자율 하락의 혜택을 받으며, 차입제약이 결합하면 한계대체율은 1+r보다 커진다.

암기 포인트

E의 오른쪽 아래 A는 차입자: 이자율 하락은 차입자에게 유리하고, 차입제약 시 한계대체율은 1+r보다 크다.

NoteBase

문 10.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은 테일러 준칙(Taylor rule)에 따라서 명목 이자율을 결정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i_t = \pi_t + \rho + \alpha(\pi_t - \pi^*) + \beta(u_n - u_t)$
(단, i_t는 t기의 명목이자율, π_t는 t기의 인플레이션율, ρ는 자연율 수준의 실질이자율, π^*는 목표 인플레이션율, u_n은 자연실업률, u_t는 t기의 실업률이며, α와 β는 1보다 작은 양의 상수라고 가정하자)

<보 기>
ㄱ. t기의 인플레이션율이 1%p 증가하면, 중앙은행은 t기의 명목이자율을 $(1+\alpha)$%p 올려야 한다.
ㄴ. t기의 실업률이 1%p 증가하면, 중앙은행은 t기의 명목이자율을 1%p 낮춰야 한다.
ㄷ. t기의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인플레이션율과 같고 t기의 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같으면, t기의 실질이자율은 ρ와 같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테일러 준칙에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변할 때 명목이자율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리고 목표 상태에서 실질이자율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명목이자율은 $i_t = \pi_t + \rho + \alpha(\pi_t - \pi^*) + \beta(u_n - u_t)$이다. α와 β는 모두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i_t - \pi_t$이다.

사용할 공식

인플레이션율이 1%p 변하면 식의 π_t 항이 1%p, $\alpha(\pi_t - \pi^*)$ 항이 α%p 변한다. 실업률이 1%p 변하면 $\beta(u_n - u_t)$ 항은 β%p 감소한다. 각 변수의 변화가 식의 어느 항에 들어가는지를 그대로 대입하는 이유는 테일러 준칙이 명목이자율의 반응폭을 직접 제시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π_t가 1%p 증가하면 명목이자율의 변화는 $1+\alpha$%p이다.
2. u_t가 1%p 증가하면 $u_n - u_t$가 1%p 감소하므로 명목이자율은 β%p 하락한다.
3. $\pi_t = \pi^*$, $u_t = u_n$이면 두 괴리항은 0이다. 따라서 $i_t = \pi_t + \rho$이고, 실질이자율 $i_t - \pi_t$는 ρ이다.

선지 판단

① ㄱ: O. 인플레이션율 1%p 증가는 π_t의 직접 효과 1%p와 인플레이션 괴리항의 효과 α%p를 합쳐 명목이자율을 $1+\alpha$%p 높인다.
② ㄴ: X. 실업률이 1%p 증가하면 명목이자율은 1%p가 아니라 β%p 낮아진다. 틀린 표현인 '1%p 낮춰야 한다' → 올바르게는 'β%p 낮춰야 한다'이다.
③ ㄱ, ㄷ: O. ㄱ은 위의 인플레이션 반응폭과 일치하고, ㄷ은 목표 인플레이션율·자연실업률 상태에서 실질이자율이 ρ가 된다는 설명과 일치한다.
④ ㄴ, ㄷ: X. ㄷ은 옳지만 ㄴ이 틀리므로 두 문장을 함께 고른 이 선택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포함 문장 ㄴ은 '1%p 낮춘다'가 아니라 'β%p 낮춘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ㄴ에서 실업률 계수 β를 빼고 실업률 증가폭 1%p를 그대로 명목이자율 하락폭으로 착각하기 쉽다. 또한 ㄱ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이 명목이자율 식에 직접 한 번 들어가므로 반응폭이 α만이 아니라 $1+\alpha$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변화한 변수를 식에 1%p만큼 대입한 뒤, 그 변수가 직접항과 괴리항에 각각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목표 상태에서는 괴리항을 0으로 놓고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 실질이자율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테일러 준칙: 물가 1%p 상승 시 $1+\alpha$%p 인상, 실업 1%p 상승 시 β%p 인하, 목표 상태의 실질이자율은 ρ이다.

NoteBase

문 11. A국가의 생산가능인구는 1,600만 명이고 실업자가 100만 명일 때, 경제활동참가율이 75 %라면 실업률은? (단,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

① 6.25 %

② 8.33 %

③ 9.10 %

④ 18.75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경제활동참가율로 경제활동인구를 구한 뒤 실업률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생산가능인구는 1,600만 명, 경제활동참가율은 75%, 실업자는 100만 명이다. 구하려는 값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인 실업률이다.

사용할 공식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참가율이고,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므로 먼저 경제활동인구를 구한다.

계산 과정

1. 경제활동인구는 1,600만 명 × 0.75=1,200만 명이다.
2. 실업률은 (100만 명)/(1,200만 명)×100=8.333…\%이다.
3.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8.33%이다.

선지 판단

① X. 6.25%는 (100만 명)/(1,600만 명)×100으로 실업자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값이다. 틀린 표현인 실업률의 분모를 생산가능인구로 두면 안 되며, 올바르게는 경제활동인구 1,200만 명을 분모로 둔다.
② O. 실업률은 (100만 명)/(1,200만 명)×100=8.33\%이므로 옳다.
③ X. 9.10%는 주어진 조건에서 산출되지 않는다. 틀린 값 9.10% 대신, 올바른 실업률은 8.33%이다.
④ X. 18.75%는 주어진 조건에서 산출되지 않는다. 틀린 값 18.75% 대신, 올바른 실업률은 8.33%이다.

오답 포인트

①처럼 실업률의 분모를 생산가능인구로 두면 6.25%가 나온다. 실업률은 생산가능인구 전체가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계산형 문제는 생산가능인구에 경제활동참가율을 곱해 경제활동인구를 먼저 구하고, 실업자를 그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뒤 100을 곱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경제활동참가율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이다.

NoteBase

문 12. 자유무역을 하는 소규모 경제의 A국이 X재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부과 이후의 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관세부과 이후에도 수입은 계속된다. 또한 A국의 X재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는 각각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적용된다)

ㄱ. A국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정부의 관세수입이 발생한다.
ㄴ. A국의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고,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ㄷ. A국에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입품 관세가 국내 가격·수입량·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내가격을 올려 국내 생산량은 늘리고 국내 소비량과 수입량은 줄인다. 수입이 계속되면 정부에는 관세수입이 생기며, 생산·소비의 왜곡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도 발생한다. 생산자 잉여는 국내가격 상승으로 증가하고, 소비자 잉여는 가격 상승으로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옳지만 ㄴ이 틀리므로 'ㄱ, ㄴ'의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ㄴ의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고,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② O: ㄱ과 ㄷ은 모두 옳다. 수입이 계속되므로 관세수입이 발생하고, 관세로 국내 생산과 소비가 효율적 수준에서 벗어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③ X: ㄴ이 틀렸으므로 'ㄴ, ㄷ'의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관세로 국내가격이 상승하므로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④ X: ㄴ이 틀렸으므로 'ㄱ, ㄴ, ㄷ'의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ㄴ은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변화를 서로 반대로 서술하였다.

오답 포인트

ㄴ처럼 관세의 가격 상승 효과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반대로 연결하는 함정이 핵심이다. 국내가격이 오르면 판매자는 더 높은 가격을 받아 생산자 잉여가 늘고, 구매자는 더 높은 가격을 내므로 소비자 잉여가 줄어든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입이 계속되는 소국의 관세 문제에서는 국내가격 상승을 먼저 판단한다. 이어서 국내생산 증가·국내소비 감소·수입 감소, 생산자 잉여 증가·소비자 잉여 감소·정부 관세수입 발생, 경제적 순손실 발생의 순서로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관세: 가격↑, 국내생산↑, 국내소비↓, 수입↓,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관세수입·순손실 발생이다.

NoteBase

문 13. 역선택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옳은 것은?

① 교통사고 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

② 피고용인의 급여에 성과급적 요소 도입

③ 감염병 예방주사 무료 접종

④ 의료보험 가입 시 신체검사를 통한 의료보험료 차등화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험시장에서 계약 체결 전의 정보 비대칭으로 생기는 역선택과 그 대책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역선택은 거래 전에 개인이 자신의 위험도 같은 정보를 상대방보다 더 많이 알아, 고위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래에 참여하는 현상이다. 보험회사는 신체검사·위험분류처럼 가입자의 위험 정보를 확인하고 보험료를 차등화하여 이를 줄일 수 있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 후 보험 가입자가 사고 예방 노력을 줄이거나 위험한 행동을 늘리는 현상이다.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선택이 제3자에게 이익이나 비용을 주지만 시장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교통사고 뒤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가입 후 운전자의 위험한 운전을 억제하는 장치이다. 이는 도덕적 해이 대책이다. 틀린 표현 → 역선택 대책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 대책이다.
② X. 급여에 성과급 요소를 넣는 것은 고용된 뒤 피고용자의 노력 유인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는 주인-대리인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장치이다. 틀린 표현 → 역선택 대책이 아니라 계약 후 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이다.
③ X. 감염병 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하는 것은 접종이 타인에게도 감염 위험 감소라는 이익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보정하는 정책이다. 틀린 표현 → 역선택 대책이 아니라 긍정적 외부효과 대책이다.
④ O. 의료보험 가입 전에 신체검사로 위험도를 파악하고 보험료를 차등화하면,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건강 위험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고위험자와 저위험자를 구별하므로 역선택을 완화한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모두 계약 후 행동을 바꾸게 하는 유인장치라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대책이다. 역선택은 계약 전 숨은 정보가 핵심이므로, ④처럼 가입 전 위험유형을 가려내는 장치가 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제가 거래 전 정보인지 거래 후 행동인지 구분한다. 거래 전 위험유형을 검사·선별·등급화하면 역선택 대책이고, 거래 후 벌점·할증·성과보상으로 행동을 유도하면 도덕적 해이 대책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역선택은 거래 전 숨은 정보, 도덕적 해이는 거래 후 숨은 행동이다.

NoteBase

문 14. 경매이론(Auction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공개 차가 경매(Second price sealed bid auction)에서는 구매자가 자신이 평가하는 가치보다 낮게 입찰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② 영국식 경매(English auction)의 입찰전략은 비공개 차가 경매의 입찰전략보다는 비공개 최고가 경매(First price sealed bid auction)의 입찰전략과 더 비슷하다.

③ 네덜란드식 경매(Dutch auction)는 입찰자가 경매를 멈출 때까지 가격을 높이는 공개 호가식 경매(Open outcry auction)이다.

④ 수입등가정리(Revenue equivalence theorem)는 일정한 가정하에서 영국식 경매, 네덜란드식 경매, 비공개 최고가 경매, 비공개 차가 경매의 판매자 기대수입이 모두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네 가지 표준 경매의 가격 진행 방식·지급가격과 수입동가정리의 적용 내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공개 최고가 경매는 각 입찰자가 한 번 비공개로 입찰하고 최고 입찰자가 자신의 입찰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비공개 차가 경매는 최고 입찰자가 낙찰되지만 두 번째로 높은 입찰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자신의 가치대로 입찰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영국식 경매는 공개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상승식 경매이고, 네덜란드식 경매는 높은 가격에서 시작하여 가격을 내리는 하강식 경매이다. 영국식 경매는 결과와 입찰 유인이 비공개 차가 경매와, 네덜란드식 경매는 비공개 최고가 경매와 각각 유사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비공개 차가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자신의 입찰액이 아니라 두 번째로 높은 입찰액을 지급하므로, 자신의 평가가치보다 낮게 입찰할 이유가 없다. 틀린 표현은 '낮게 입찰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올바르게는 자신의 평가가치와 같게 입찰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② X. 영국식 경매는 가격이 올라가다가 탈락하는 방식이므로, 최종 지급가격이 경쟁자의 평가에 의해 정해지는 비공개 차가 경매와 입찰전략이 더 유사하다. 틀린 표현은 '비공개 최고가 경매의 입찰전략과 더 비슷하다'이다. 올바르게는 비공개 차가 경매의 입찰전략과 더 비슷하다.

③ X. 네덜란드식 경매는 높은 가격에서 시작해 가격을 점차 낮추고, 최초로 수락하는 입찰자가 낙찰받는다. 틀린 표현은 '가격을 높이는 공개 호가식 경매'이다. 올바르게는 가격을 낮추는 공개 하강식 경매이다.

④ O. 위험중립적 입찰자, 독립적 사적가치 등 수입동가정리의 가정 아래에서는 영국식·네덜란드식·비공개 최고가·비공개 차가 경매의 판매자 기대수입이 모두 같을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는 영국식과 비공개 차가 경매의 대응관계를, ③은 영국식과 네덜란드식의 가격 방향을 뒤바꾼 선지이다. ①은 '차가'라는 말 때문에 낮게 써도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차가 경매의 핵심은 진실한 가치 입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가격이 올라가면 영국식, 내려가면 네덜란드식으로 구분한다. 이어서 비공개 경매에서 낙찰자가 자신의 입찰액을 내면 최고가, 두 번째 높은 입찰액을 내면 차가로 구분한다. 영국식-차가, 네덜란드식-최고가를 짝지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영국식은 상승·차가와 유사, 네덜란드식은 하강·최고가와 유사, 차가 경매는 진실 입찰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자료의 내용과 부합하는, A 씨의 1년 후 예상 환율은?

A 씨는 은행에서 운용 자금 100만 원을 1년간 빌리기로 했다. 원화로 대출받으면 1년 동안의 대출 금리가 21%인 반면, 동일한 금액을 엔화로 대출받으면 대출 금리는 10%이지만 대출금은 반드시 엔화로 상환해야 한다. 현재 원화와 엔화 사이의 환율은 100엔당 1,000원이고, A 씨는 두 대출 조건이 같다고 생각한다.

① 1,000원/100엔

② 1,100원/100엔

③ 1,200원/100엔

④ 1,250원/100엔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원화 대출과 엔화 대출의 만기 상환액을 같은 원화 금액으로 만드는 1년 후 환율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원화 대출 원금은 100만 원, 연이율은 21%이므로 1년 후 원화 상환액은 121만 원이다.
현재 환율은 100엔당 1,000원이므로 100만 원은 10만 엔이다. 엔화 대출의 연이율은 10%이므로 1년 후 엔화 상환액은 11만 엔이다.
구할 값은 1년 후 100엔당 원화 환율이다.

사용할 공식

1년 후 엔화 상환액의 원화 가치 = 엔화 상환액 ÷ 100 × 1년 후 100엔당 환율이다.

엔화로 빌렸더라도 원화 대출과 조건이 같으려면, 이 원화 환산 상환액이 원화 대출 상환액 121만 원과 같아야 한다.

계산 과정

1. 원화 대출의 만기 상환액은 $1,000,000 \times 1.21 = 1,210,000$원이다.
2. 엔화 대출 원금은 $1,000,000 \times 100/1,000 = 100,000$엔이고, 만기 상환액은 $100,000 \times 1.10 = 110,000$엔이다.
3. 1년 후 환율을 x원/100엔이라 하면 엔화 상환액의 원화 가치는 $110,000/100 \times x = 1,100x$원이다.
4. $1,100x = 1,210,000$이므로 $x = 1,100$이다. 따라서 1년 후 예상 환율은 100엔당 1,1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100엔당 1,000원이면 11만 엔의 원화 상환액은 110만 원이다. 원화 대출 상환액 121만 원보다 작으므로 두 조건이 같지 않다. 틀린 표현인 '1,000원/100엔' → 올바르게는 '1,100원/100엔'이다.
② O: 100엔당 1,100원이면 11만 엔은 $110,000/100 \times 1,100 = 1,210,000$원이다. 원화 대출의 만기 상환액과 일치한다.
③ X: 100엔당 1,200원이면 엔화 상환액은 132만 원이 되어 원화 대출 상환액보다 크다. 틀린 표현인 '1,200원/100엔' → 올바르게는 '1,100원/100엔'이다.
④ X: 100엔당 1,250원이면 엔화 상환액은 137만 5천 원이 되어 원화 대출 상환액보다 크다. 틀린 표현인 '1,250원/100엔' → 올바르게는 '1,100원/100엔'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현재 환율만 그대로 적용하여 엔화 대출의 낮은 금리만 비교한 값이다. 엔화 대출의 금리가 11%포인트 낮으므로, 두 조건이 같아지려면 엔화 가치가 상승하여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화 대출 문제는 원금을 먼저 외화로 환산하고, 외화 만기 상환액을 구한 뒤, 그 원화 가치가 원화 대출의 만기 상환액과 같도록 환율을 놓고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외화 대출의 원화 부담 = 외화 만기 상환액 × 만기 환율이다. 외화금리가 더 낮아도 외화가치가 오르면 이점이 줄어든다.

NoteBase

문 16. 다음 제시문의 ㉠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구매력평가이론(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은 양국의 화폐 1단위의 구매력이 같도록 환율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구매력평가이론에 따르면 양국 통화의 (㉠)은 양국의 (㉡)에 따라 결정되며, 구매력평가이론이 성립하면 (㉢)은 불변이다.

① ㉠: 실질환율, ㉡: 경상수지, ㉢: 명목환율

② ㉠: 명목환율, ㉡: 경상수지, ㉢: 실질환율

③ ㉠: 명목환율, ㉡: 물가수준, ㉢: 실질환율

④ ㉠: 실질환율, ㉡: 물가수준, ㉢: 명목환율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구매력평가이론에서 명목환율·물가수준·실질환율의 관계를 묻는다.

핵심 개념

명목환율은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를 교환하는 비율이다. 구매력평가이론에서는 양국 화폐의 구매력이 같아지도록 명목환율이 양국의 물가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실질환율은 물가수준을 반영한 상대가격이며, 구매력평가가 성립하면 불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실질환율'과 '경상수지'가 틀린 표현이다. 구매력평가이론에서 양국 물가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명목환율이며, 이 이론이 성립하면 실질환율은 불변이다.

② X. '경상수지'가 틀린 표현이다. 명목환율은 양국의 물가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실질환율이 불변이라는 부분은 맞지만, 두 번째 빈칸 때문에 틀린 선지이다.

③ O. 명목환율은 양국의 물가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구매력평가가 성립하면 실질환율은 불변이라는 설명이 모두 맞다.

④ X. '실질환율'과 '명목환율'이 서로 바뀌었다. 물가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명목환율이고, 구매력평가가 성립할 때 불변인 것은 실질환율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의 역할을 바꾸어 제시한 점이 함정이다. 명목환율은 물가수준 차이를 반영해 조정되고, 그 결과 실질환율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구매력평가이론이 제시되면 먼저 '물가수준의 비율로 결정되는 변수는 명목환율'인지 확인하고, 이어서 '불변인 변수는 실질환율'인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PPP: 물가수준 → 명목환율 결정, 실질환율 → 불변이다.

NoteBase

문 17. 큰 기업인 A와 다수의 작은 기업으로 구성된 시장이 있다. 작은 기업들의 공급함수를 모두 합하면 $S(p) = 200 + p$, 시장의 수요곡선은 $D(p) = 400 - p$, A의 비용함수는 $c(y) = 20y$이다. 이때 A의 잔여수요함수($D_A(p)$)와 균형가격(p)은? (단, y는 A의 생산량이다)

① 잔여수요함수: $D_A(p) = 400 - 2p$, 균형가격: $p = 50$

② 잔여수요함수: $D_A(p) = 200 - 2p$, 균형가격: $p = 60$

③ 잔여수요함수: $D_A(p) = 200 - 2p$, 균형가격: $p = 50$

④ 잔여수요함수: $D_A(p) = 400 - 2p$, 균형가격: $p = 6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큰 기업 A가 경쟁적인 작은 기업들의 공급을 먼저 제외한 잔여수요를 구하고, 그 잔여수요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시장수요는 $D(p) = 400 - p$이고, 작은 기업들의 총공급은 $S(p) = 200 + p$이다. A가 판매할 수 있는 양은 시장수요에서 작은 기업들이 공급하는 양을 뺀 잔여수요이다. A의 한계비용은 비용함수 $c(y) = 20y$의 기울기이므로 20이다.

사용할 공식

잔여수요는 $D_A(p) = D(p) - S(p)$이다. 이윤은 $\pi(p) = [p - 20]D_A(p)$로 쓴다. 작은 기업들이 가격 p에 따라 $200 + p$만큼 공급하므로, A는 전체 시장수요가 아니라 이들을 뺀 수요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잔여수요는 $D_A(p) = (400 - p) - (200 + p) = 200 - 2p$이다.
2. A의 이윤은 $\pi(p) = (p - 20)(200 - 2p) = -2p^2 + 240p - 4000$이다.
3. 이윤을 가격으로 미분하면 $d\pi/dp = 240 - 4p$이므로, $240 - 4p = 0$에서 $p = 60$이다. 이때 이차항의 계수가 음수이므로 이윤은 최대가 된다.

선지 판단

① X. 잔여수요를 $400 - 2p$로 한 표현이 틀리다. 작은 기업 공급 $200 + p$ 전체를 시장수요에서 빼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D_A(p) = 200 - 2p$이다. 또한 균형가격도 50이 아니라 60이다.
② O. 잔여수요 $D_A(p) = 200 - 2p$와 이윤극대화 가격 $p = 60$이 모두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③ X. 잔여수요 $D_A(p) = 200 - 2p$는 맞지만, 가격 $p = 50$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p = 60$이다.
④ X. 가격 $p = 60$은 맞지만, 잔여수요를 $400 - 2p$로 한 표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D_A(p) = 200 - 2p$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과 ④의 함정은 작은 기업 공급에서 상수항 200만 빼고 가격에 따라 늘어나는 p까지 빼지 않는 데 있다. 잔여수요는 두 함수 전체를 빼므로 기울기는 $-1-1=-2$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큰 기업과 경쟁적 주변기업이 함께 있으면 먼저 시장수요-주변기업공급으로 큰 기업의 잔여수요를 구한다. 그다음 잔여수요를 이용해 수입에서 비용을 뺀 이윤함수를 만들고, 미분값을 0으로 두어 가격 또는 생산량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큰 기업의 잔여수요 = 시장수요 − 작은 기업들의 총공급이다. 이 문제에서는
$400-p-(200+p)=200-2p$이다.

NoteBase

문 18. 어느 경제의 총생산함수는 $Y = AL^{1/3}K^{2/3}$이다. 실질 GDP 증가율이 5%, 노동증가율이 3%, 자본증가율이 3%라면 솔로우 잔차(Solow residual)는? (단, Y는 실질 GDP, A는 기술수준,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① 2%

② 5%

③ 6%

④ 12%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의 성장회계식을 이용하여 솔로우 잔차, 즉 기술수준의 증가율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실질 GDP 증가율 5%, 노동 증가율 3%, 자본 증가율 3%이다. 구할 값은 기술수준 A의 증가율이다. 생산함수에서 노동의 지수는 1/3, 자본의 지수는 2/3이다.

사용할 공식

생산함수 $Y = AL^{1/3}K^{2/3}$의 성장회계식은 $g_Y = g_A + \frac{1}{3}g_L + \frac{2}{3}g_K$이다. 생산요소의 증가율은 각 지수만큼 가중하여 산출 증가율에 기여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노동의 기여분은 $\frac{1}{3} \times 3\% = 1\%$이다. 자본의 기여분은 $\frac{2}{3} \times 3\% = 2\%$이다. 따라서 $g_A = 5\% - 1\% - 2\% = 2\%$가 된다.

선지 판단

① O: 솔로우 잔차는 실질 GDP 증가율에서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을 뺀 값이며, 계산 결과 2%이다.
② X: 5%는 실질 GDP 증가율이다. 틀린 표현인 '솔로우 잔차가 5%'는 '실질 GDP 증가율이 5%'로 고쳐야 한다.
③ X: 6%는 노동과 자본 증가율 3%를 단순히 더한 값이다. 틀린 표현인 '솔로우 잔차가 6%'는 '요소 증가율은 각 생산탄력성으로 가중하여 더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12%는 주어진 성장회계식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틀린 표현인 '솔로우 잔차가 12%'는 '솔로우 잔차는 2%'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노동과 자본의 증가율이 모두 3%라고 해서 각각의 기여분도 3%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함수의 지수인 1/3, 2/3을 곱한 뒤 산출 증가율에서 차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계산형 문제는 산출 증가율을 먼저 적고, 각 생산요소 증가율에 해당 지수를 곱한 기여분을 구한 다음, 그 합을 산출 증가율에서 뺀다.

암기 포인트

솔로우 잔차 = 산출 증가율 - 노동의 가중 기여분 - 자본의 가중 기여분이다.

NoteBase

문 19. A점에서 장기 균형을 이루고 있는 AD-AS 모형이 있다. 오일쇼크와 같은 음(-)의 공급충격이 발생하여 단기 AS곡선이 이동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기균형점에서 물가수준은 A점보다 높다.

② A점으로 되돌아오는 방법 중 하나는 임금의 하락이다.

③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면, A점의 총생산량 수준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④ 정부지출을 늘리면 A점의 물가수준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음의 공급충격으로 단기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 뒤 물가와 총생산량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조정으로 장기균형에 이르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음의 공급충격은 생산비 상승 등으로 단기총공급곡선을 좌측 이동시켜 물가수준을 올리고 총생산량을 줄인다. 총수요를 늘리면 총생산량은 잠재산출량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물가수준은 더 높아진다. 임금 하락은 생산비를 낮춰 단기총공급곡선을 우측 이동시킨다.

선지별 해설

① O. 단기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같은 총수요 아래 물가수준은 A점보다 높고 총생산량은 낮은 단기균형이 형성된다.

② O. 임금이 하락하면 기업의 생산비가 낮아져 단기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 조정은 충격 전 A점의 물가수준과 총생산량으로 돌아가는 경로가 될 수 있다.

③ O. 통화량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줄었던 총생산량은 A점의 총생산량, 즉 잠재산출량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 다만 물가수준은 A점보다 높아진다.

④ X. 틀린 표현은 ‘A점의 물가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이다. 정부지출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총생산량을 회복시킬 수 있으나, 공급충격으로 이미 상승한 물가를 더 올린다. 올바르게는 ‘정부지출을 늘리면 A점의 총생산량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으나 물가수준은 A점보다 높다’이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④는 모두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총수요 확대는 생산량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만, 음의 공급충격 뒤의 물가수준을 A점으로 되돌리지는 못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음의 공급충격이면 먼저 단기총공급곡선의 좌측 이동, 물가 상승, 생산량 감소를 확인한다. 이후 총수요 확대는 생산량 회복과 추가 물가 상승을, 임금 하락은 단기총공급의 우측 이동을 뜻하는지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음의 공급충격: 물가↑·생산량↓. 총수요 확대: 생산량↑·물가↑. 임금 하락: 단기총공급 우측 이동이다.

NoteBase

문 20. A국가의 통화량이 5,000억 원, 명목 GDP가 10조 원, 실질 GDP가 5조 원이라면 화폐수량설이 성립하는 A국가의 화폐유통속도는?

① 10

② 15

③ 20

④ 25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화폐수량설의 교환방정식으로 화폐유통속도 V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통화량 M은 5,000억 원이고, 명목 GDP PY는 10조 원이다. 실질 GDP 5조 원은 물가수준 P를 따로 구할 때 쓰일 수 있는 정보이지만, 여기서는 명목 GDP가 주어져 있어 직접 계산에는 필요하지 않다.

사용할 공식

화폐수량설의 교환방정식은 $MV = PY$이다. 여기서 PY는 물가수준과 실질 GDP의 곱, 즉 명목 GDP이므로 $V = \frac{PY}{M}$를 사용한다.

계산 과정

5,000억 원은 0.5조 원이다. 따라서
V=(10조 원)/(0.5조 원)=20
화폐유통속도는 20이다.

선지 판단

① X: 계산 결과는 20이므로 10은 틀리다. 틀린 표현 '10' → 올바르게는 '20'이다. 10은 통화량 0.5조 원을 명목 GDP 10조 원과 비교할 때 분모를 두 배로 잘못 잡은 값이다.
② X: 계산 결과는 20이므로 15는 틀리다. 틀린 표현 '15' → 올바르게는 '20'이다. 15는 교환방정식에 근거하지 않고 중간값처럼 판단한 오답이다.
③ O: V=10조÷0.5조=20이므로 옳다.
④ X: 계산 결과는 20이므로 25는 틀리다. 틀린 표현 '25' → 올바르게는 '20'이다. 25는 통화량 5,000억 원을 0.4조 원으로 잘못 환산하면 나오는 값이다.
계산 결과가 20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실질 GDP 5조 원을 곧바로 분모에 넣는 함정을 주의한다. 화폐유통속도는 $V = PY/M$이고, PY에는 실질 GDP가 아니라 명목 GDP를 넣는다. 또한 5,000억 원은 0.5조 원으로 단위를 맞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폐수량설 문제에서는 먼저 $MV = PY$를 쓰고, 주어진 GDP가 명목 GDP인지 실질 GDP인지 구분한다. 명목 GDP가 주어지면 V=명목 GDP÷통화량으로 바로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화폐유통속도는 '명목 GDP ÷ 통화량'이다.

NoteBase